



주간통일정세 2012-07(2012.02.06~02.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2-07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김정은, 동해함대사령부 시찰(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인 민군 해군 제597연합부대 지휘부와 산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6일에 전함.
  - 제597연합부대는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동해함대사령부로 알려졌으며, 중앙통신도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것을 비롯해 자랑찬 위훈을 세운 부대"라고 소개해 동해지역 부대임을 확인함.
  - 김 부위원장은 제597연합부대 지휘부를 찾아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 등을 둘러보고 부대의 임무수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나서 "해병들을 만능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젊은 영도자는 영광...김정은 약점덮기(2/7, 노동신문; 조선신보)**
  - 노동신문에 지난달 28일 실린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의 최고영도자,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젊으시다"며 "김일성 조선을 더욱 빛내이실 젊으신 위대한 영도자를 받들어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젊은 김 부위원장을 찬양함.
  - 이 신문은 김 부위원장이 10대 때부터 비범한 정치적 식견을 보였고 '인공 지구위성(인공위성)과 핵시험(핵실험)을 진두지휘했다고 거듭 선전함.
  - 또한 김일성 주석이 불과 15세에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10대 때 인민으로부터 첫 태양송가(太陽歌) '조선의 별'을 받았으며 20대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했다고 자랑함.
  - 조선신보는 6일 '인민에게 희망 안기는 젊은 영도자'라는 글에서 "외국 언론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후계자로서의 준비기간이 짧다고 제멋대로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며 "조선에서 영도자의 젊음은 불안요소가 아니라 '안심감'의 근거"라고 주장함.
  
- **김정은 軍에 선물도 쏘 답습...쌍안경·소총(2/8,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TV는 7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제597연합부대 지휘부(동해함대사령부)와 산하 부대 시찰 소식을 방영하면서 김 부위원장이 장병에게 소총 1자루를 건네주고 쌍안경을 목에 걸어주는 사진을 내보냄.
  - 조선중앙통신도 그 전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부대 해병들이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쌍



안경과 자동보총(자동소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보도함.

- 새해 들어 김 부위원장이 시찰한 군부대는 9곳이지만, 북한 매체가 쌍안경과 자동소총의 선물 소식을 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쌍안경과 자동보총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군부대를 시찰할 때 주로 선물한 것임.

● 北, 김정은 또 군부대 시찰(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위원장은 제324대연합부대의 연합부대 지휘부와 관하 군부대를 시찰하며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 작전연구실, 전방지휘소를 돌아보며 훈련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함.
- 이번 군부대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명국·박재경 대장, 로홍세·리두성 중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외조부는 제주고씨 31세손(2/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외할아버지 고경택(1999년 사망)씨가 제주 고씨 영국공파 중시조 31세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北 김정일 사후 첫 생일 분위기 띄우기(2/1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인 '광명성절'을 띄우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지난 8일 평안남도 증산군 석다산의 바위에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주체101(2012)년 2월 16일'이라는 글귀를 새겼다. 글귀는 전체 길이가 무려 120m나 되며 이름 글자는 높이 10m, 너비 5.5m 깊이가 1.4m나 됨.
-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가 10일 평양시 청춘거리 농구경기장에서 개막돼 농구, 배구, 탁구, 아이스하키 등 10개 종목에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7일 국제문화회관에서는 제4차 전국소묘축전이, 8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영화상영순간이 개막
- 또 창광산 호텔에서는 전국요리기술경연이 열리고 있고, 국가우표발행국은 김 위원장의 생일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음.

● 北 '평양의 강북' 동평양 본격 개발(2/12, 노동신문)

- 평양은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중심부를 가리키는 '본평양', 서쪽의 '서평양'과 대동강 오른편의 '동평양' 등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동평양은 가장 개발이 덜 된 곳으로 평가돼왔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에 따라 동평양지구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서는 창광원식목욕탕과 인민야외빙상장이 힘있게 추



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 노동신문에 따르면 창광원식목욕탕은 대중목욕탕, 개별목욕탕, 치료체육실, 이발실, 미용실, 안마실, 청량음료점 등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봉사기지'로 꾸려지고, 인민야외빙상장은 선수들의 경기가 열리고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이 1년 내내 체력을 단련하는 체육공간임.

■ 김정은 동향

- 2/6 김정은 부위원장, 2.6 해군 제597연합부대 지휘부와 관하 군부대들 시찰(2.6, 중통·중방)
  - 동행인 未보도
- 2/7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와 관하 군부대(대연합부대 전방지휘소·조선인민군 제156군부대) 시찰(2.8, 중통·중·평방)
  - 리영호(軍총참모장)·김영춘(인민무력부장)·김명국·박재경(대장)·로흥세·리두성(중장)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위원장 70회 생일(2.16, 광명성절) 관련 등 동향
  - 전국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으로 행군, 2.17일까지 진행(2.7, 중통·중방)
  - 백두산밀영 개원 이래 20여년간 내·외국인 등 '600여 만명 방문 및 새해들어 현재까지 무력기관 등 내국인 1만5,000여명' 참관(2.7, 중방)
  - 전국 직맹원들의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 2.5~9일까지 진행(2.9, 중통)
  -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2.9 김기남·양형섭·문경덕·강능수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9, 중통)
  - 조선우표전시회(2.9~18) 개막식, 2.9 김기남(黨비서)·심철호(체신상) 등 참가下 조선우표전시관에서 진행(2.9, 중통)
  - '백두밀영결의대회', 2.12 리영호·김기남·최태복·김정각·박도춘·최룡해 등 참석下 진행(2.12, 중통)
- 최영림 총리, 2.10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력생산 실태와 보일러·터빈발전기 운영정형 현지요해(2.10,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하루이용자 10만 명 대형장마당 최소 2곳(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장마당이 최소한 2개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칼 거쉬만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북한에 있는 50개 장마당의 위치와 규모,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 등에 대해 NED 산하 연구소가 진행한 연구결과를 설명하며 "(장마당에서는) 상품뿐 아니라 정보가 교환되고 소통이 이뤄진다"며 "장마당을 북한판 시민사회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함.
  - 방송은 장마당 상인 사이에 자리 이용에 관한 권리가 거래되고 비공식 은행체제도 생겨나는 등 자본주의 시장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함.
- **北, 고려항공 기내식·서비스 최악 수준(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 항공사의 서비스와 시설 등을 평가하는 영국의 항공 전문 자문회사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가 북한 고려항공을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北,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법 개정(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외국투자은행법을 수정·보충하여 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우대조건과 관련해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 기업소득세를, 조선은행(북한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봉사(서비스)·건설 부분의 외국투자기업이 수입금의 2~10%를 내도록 규정하며, 기존 외국투자은행법에는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면제에서 50% 한도의 내용이 빠짐.
    - 중앙통신은 "5개장, 32개조로 구성된 법에는 외국투자은행의 분류와 설립 지역, 소유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다"고 소개함.
  - **北, 외국투자기업등록법·세금법도 개정(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외국투자기업등록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을 개정하여 "조선의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이 달라졌다"며 "2011년 12월21일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이 법은 6개 장에 34개 조로 구성됐다"고 전함.
    - 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도 수정·보충(개정)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설명하지 않음.
  - **美 작년 대북수출액 전년比 크게 증가(2/11, 자유아시아방송(RFA))**
    - 2011년 미국의 대북한 수출액이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의 발표를 인용해 1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2011년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상품은 총940만 달러 규모였으며, 이는 2010년도의 190만 달러에 비해 약5배 증가한 것임.
- 최대 수출품목은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보낸 구호물품으로 전체 수출액의 95%에 달했으며, 이밖에 밀가루와 녹말을 비롯한 제빵 재료와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종이류도 주요 수출품으로 분류됐다고 RFA는 전했다.

■ 기타 (대내 경제)

- 北, '외국투자은행법' 수정 보충(2.9,중통)
  - 외국투자은행 분류와 설립지역, 소유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5개장 32개조)
  -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조선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영업세'를 면제
- '외국투자기업 등록법' 수정('11.12.21字, 최고인민회의 정령) · 보충(2.10,중통)

다. 군사

● 北, NLL인근 공기부양정기지 완공(2/9, 연합뉴스)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9일 "북한이 황해도 고압포에 건설 중인 공기부양정 기지가 최근 위성사진 판독 결과 완공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공기부양정 침투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라. 사회 · 문화

● 北 대보름도 '김정일 추모' 띄우기 활용(2/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을 맞이한 우리 모두는 민속명절을 되찾아 주시고 즐겁게 쇠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가슴 적시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정월 대보름을 민속명절로 "되찾아줬다"고 설명함.
-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한 조선중앙TV는 기록영화 '이 세상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현지지도의 길 위에 꽃핀 사랑의 전설 8', 소개편집물 '장군님 사랑 어린 체육인 영양식품생산기지 금곶체육인종합식료공장' '사랑의 친필' 등 김일성 주석이나 김 위원장의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냄.

● 北이 밝힌 '광명성' 호칭의 시원은 백두산(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을 앞둔 6일 '조선을 향도한 광명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일컫는 '광명성(光明星)'



이란 호칭의 시원은 '1942년 백두산 밀영'이라고 주장함.

- UN "北인구 2030년 2천618만 명...7% 증가"(2/7,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소폭 증가한 2천618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자료를 인용해 7일 전함.
  - 경제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1 아시아태평양 인구와 개발 지수'에 따르면 2011년 중순 북한인구는 총 2천445만1천명으로 추산돼 전체 58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19위였음.
  - 북한의 출산율은 현재 수준의 인구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 기준인 2.1명에 못 미치는 2.0명이었고, 14세 미만 인구 증가율은 -1.4%를 기록해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7% 늘어난 2천61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北 '김정일 고향집' 부각... "매일 2천명 답사"(2/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8일 "김정일 동지에 대한 흥미심을 안고 백두산 밀영의 고향 집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매일 2천여 명에 달한다"며 답사자에는 성(省), 중앙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의 일꾼과 근로자, 청소년 학생 등이 망라돼 있다고 밝힘.
- 北, 바위에 '김정일 찬양' 120m 글귀(2/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8일 김정일 생일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증산군 석다산 천연바위에 총길이 120m의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글귀를 새겼다고 보도함.
  - 글귀는 전체길이가 무려 120m나 되며 이름 글자는 높이가 10m, 너비가 5.5m 깊이가 1.4m가 되며 준공식에는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北 국경지역 탈북자에 총기사용 금지령(2/8, 오늘의 북한소식)
  - 대북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발간하는 '오늘의 북한소식'(441호)에서 북한 중앙당이 국경에서 탈북하는 주민들에게 총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보안당국과 군부대에 지시한 것으로 밝힘.
- 北 휴대전화 신청서에 '비밀유출' 금지항목(2/9, 자유아시아 방송(RFA))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국가비밀에 관한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RFA는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로부터 제공받은 북한의 '이동통신 등록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가입자의 준수사항 10가지 가운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불순한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신청서는 북한 주민의 이름과 성별, 출생일, 직장지위, 신분증 번호, 집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명기하도



록 되어 있음.

- **작년 중국방문 北주민 15만 명 넘어...사상최대(2/10,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 2010년의 11만6천400명보다 약 31% 늘어났으며 사상 최대였던 2005년 12만5천800명 보다 2만6천500명이 더 많은 15만2천300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 발표를 인용해 10일 전함.
  - 작년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 중 절반가량(7만5천여 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취업이 목적이고, 회의 참석이나 사업 목적 방문이 3만9천여 명, 관광객은 4천500여명이었음.
  - 교통수단별로는 선박 이용자가 6만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항공기 약 3만4천명, 자동차 약 3만2천명, 기차 1만9천여 명, 도보 5천200여명 순임.
  - 성별로는 남성이 13만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별로는 45~64세 7만2천여 명, 25~44세 6만4천여 명이었음.
- **北남포항 2년 연속 결빙..."이례적 현상"(2/10, 연합뉴스)**
  - 고려대기환경연구소(소장 정용승)는 10일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백령도 북쪽의 송화군 앞바다에서 압록강 하구까지 유빙이 폭 40km, 길이 200km로 확장됐다고 밝힘.
- **北 휴대전화 월평균 1만6천원 지불(2/11, 이코노미스트)**
  -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평균 13.9 달러(약 1만6천원)를 쓰고 현금으로 전화비를 지불한다고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
  - 이 잡지는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데 몰두하는 북한 젊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휴대전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필수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경 근처에서 중국의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왔으나, 이제 평양의 공식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 이집트 오라스콤이 지분의 75%를 갖고 있는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는 18개월 만에 가입자 수를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렸음.
- **北 주민·국경통제 대폭 완화...유화정책 선회?(2/12, 연합뉴스)**
  -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와 국경통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북한을 나온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전언임.
  - 며칠 전 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 강모(41,여)씨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군님(김정일) 사망 이후 1월 초까지 주민들의 여행을 통제했던 (북한) 당국이 최근 통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돈만





떨러주면 통행증이나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 **北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4월10일 개막(2/12, 연합뉴스)**

- 북한이 자랑하는 초대형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이 올해 4월10일 개막할 것으로 알려졌다.
- 12일 미국 내 북한 전문여행사인 '뉴코리아투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아리랑 공연은 4월10일~5월1일, 8월1일~9월15일 진행된다고 전함.
- 또 "한국계 미국인 등은 여행할 수 있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당국에 의해 입국이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핵제재에 동병상련?...北 이란 편들기(2/6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6일 "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란이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해나가고 있다"며 "반이란 적대세력이 아무리 합세해 달려들어도 이란 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최근 이란이 원유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벌인 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이란이)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다"며 "이란 해군은 그 어떤 제국주의의 압력과 책동에도 강하게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평가함.
- 조선중앙통신도 6일 이란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가 지난 3일 "이란은 핵개발을 가로막으려는 서방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고 보도함.

● **北, 日에 북송 일본인 처 일시 귀국 제안(2/8,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 측에 1950~1980년대 재일동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이른바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재개 등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북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중국에서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납치문제 담당상을 만났을 때 요도호 납치범 송환이나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재개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일본에서 진행되는 美日합동군사연습에 주한미군 참가 관련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의 일환"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전쟁전략'이라고 재차 비난(2.8,중통/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
- 日 외상 '겐바'의 독도 발언(독도문제와 관련해 할 말은 하겠다, 끈기있는 대응)에 대해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전쟁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과거 죄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 요구(2.8,중통/일본의 망상)
- 2013년도 예산에 조총련 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불 중지 결정(1.16,도쿄) 관련 "반공화국, 반총련 적대의식과 민족배타주의의 직접적 발로"라고 비난(2.8,중통·민주조선/일본의 비열하고 유치한 망동을 규탄)

나. 6자회담(북핵)

● 北, 1998년 우라늄 농축 착수(2/11,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알려진 것보다 2년 빠른 1998년에 우라늄 농축 핵개발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
- 이 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활동에 밝은 복수의 외교관계자와 핵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1990년대 후반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와 접촉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등을 입수했고, 1998년 4월 핵무기 원료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물질인 6불화우라늄(UF6)을 시험 제작한 뒤 이를 칸 박사에게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 신문은 또 파키스탄이 북한산 노동 미사일(파키스탄명 가우리)을 도입했다가 대금이 밀리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음.

3. 대남정세

● 인천시 "올해 남북협력사업에 20억 원 지원"(2/8, 연합뉴스)

- 인천시는 8일 '2012년도 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억 원 예산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12개를 지속하여 추진키로 계획함.

● 경기도교육청, 북한 개성에 책걸상 5천쌍 등 '지원 대북 지원·교류 계획' 마련 "평화교육 일환"(2/8,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올해부터 5년간 북한 개성시 관내 유치원과 소·중학교에 책걸상과 컴퓨터 등 각종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



고 교육분야 교류도 추진할 계획임.

● 통일부, 민족사랑나눔 대북지원 승인(2/8, 연합뉴스)

- 통일부는 8일 민족사랑나눔이 신청한 대북 지원용 물자 반출을 승인했으며 대북 지원단체인 민족사랑나눔은 평안북도 일대 탁아소와 고아원, 소아병원에 아동용 의류와 기초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총 14억9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임.

● 北 '병충해 방제' 남북당국 접촉 사실상 거부 (2/9,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9일 통일부가 산림청 명의로 7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 국토환경보호성에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 지원 문제를 협의할 남북당국 간 실무접촉을 사실상 거부함.

-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 위원회의 접촉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이날 '불허채동에 깔린 저의라는 논평을 내고 "불허의 밑바탕에는 추악한 정치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더우기 겨레를 격분하게 하는 것은 통일부패당이 '당국간 대화'를 운운한 것"이라며 "이명박 패당은 가장 초보적인 예의조차 무시한 천하의 패륜패덕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을 말할 자격을 영영 상실했다"고 밝힘.

● 국방부, 北 WMD·사이버위협 대응조직 강화(2/9, 연합뉴스)

- 국방부는 9일 일부 과(課)의 임무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힘.

-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비확산정책과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 변경했으며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북한의 WMD 공격에 대응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됨.

●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지원액 상향조정(종합)(2/9, 연합뉴스)

- 통일부는 제3국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상봉이나 생사확인 후 교류지속은 기존 50만원을 유지하기로 9일 밝힘.

● 6·15남측위 선양행...남북접촉 강행(종합)(2/9,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은 9일 "남측위 실무접촉 대표단이 북측위와 접촉을 위해 오전 10시30분 중국 선양으로 출발했다"며 "일행은 11일 오전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7일 "6·15남측위의 북측위 접촉 신청에 수리 거부했다"고 밝혔고, 당일 남측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불허해도 선



- 양에서 접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전함.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남측위)는 9일 오후 3시(현지시각)부터 북한이 운영하는 중국 선양(瀋陽)의 칠보산호텔에서 북측 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시작함.
- **남북특위·외통위 의원 8명 개성공단 방문(2/10, 연합통신)**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10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함.
  - **北 "이산가족 교류촉진' 주장은 기만책"(2/1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최근 상봉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0일 "민심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왜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내흔드는가'라는 논평에서 통일부가 "인도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지가 있는 듯이 생색을 냄으로써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죄악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근본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음.
  - **통일부 "허가 없이 北접촉 강행, 범대로 처리"(2/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접촉 허가 없이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관계자들에 대해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11일 밝혔음.
    -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접촉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측위 관계자들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을 강행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음.
  - **범민련 "올해 민족공동행사 반드시 성사"(2/11,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북·해외본부는 11일 "6·15선언 발표 12돌, 10·4선언 발표 5돌을 맞아 북남, 해외의 각계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북·해외본부는 이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된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내놓은 '제13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을 통해 "범민련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라며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합동 군사연습을 저지하고 반통일적 대결론과 외세와의 군사적 결탁을 배격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음.
  - **6·15남측위, "북측에 금강산 공동행사 제안"(2/12,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지난 9~11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올해 6·15공동선언 12



주년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열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 남측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같이 제안했다며 북측위는 남측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남측위는 또 6·15 민족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실질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 기타 (대남)

-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을 위한 '전략계획지침 서명' 및 제주도에서의 韓美日 국방당국자들의 회담(1.30~31) 관련 "상전과 주구의 위험한 군사적 결탁으로서 외세와 공모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극악한 반역행위"라고 비난(2.8, 중통·노동신문·평방/상전과 주구의 위험한 군사적 결탁)
- 우리 정부의 '기회의 창', '대화' 등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의 반통일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기만술책"이라고 왜곡하며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패당에게 있다"고 지속 책임 전가(2.8, 평방·노동신문/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北,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육군 39사단이 공중기동훈련을 기본으로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2.8, 중통·중방)
- 統一部の '6.15남측측 대북접촉 불허' 관련 '당국간 대화를 걸고 6.15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거래의 전진을 지체시켜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2.9, 우리민족끼리/불허책동에 깔린 저의)
- 統一部の '南北관계현황자료'(北이 불안정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못한 상황 등) 국회 보고 관련 '기만적 대화타령이 헛나발이 되자 '경제난·불안정'이니 뭐니 하며 모락날조소동에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2.9, 우리민족끼리/있지도 않는 불안정 타령을 불어댄 속심)
- 韓-美행정협정(SOFA) 발효일(1967.2.9)을 맞으며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애걸하는 역적패당 심판'과 '현대판 노예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주권과 인권을 되찾기 위한 反美 투쟁' 선동(2.9, 우리민족끼리/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
- 제13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2.11 남·북·해외 사이에 모사전송 방식으로 진행(2.11, 중통·중방)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한-러,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 논의(2/8)

-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해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이태담당 차관과 회담함. 현지 외교 소식통은 임 대표가 이날 오전(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를 통해 모스크바로 들어와 오후에 마르굴로프 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양측은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새 지도자 김정은이 말년에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접촉을 강화한 아버지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러시아는 이달 1일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미국 최고위 북핵 당국자와의 회담에서도 6자회담 조기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마르굴로프 대표와 러시아를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회담이 끝난 뒤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가능한 한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데 관심을 보였고, 이 방향으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8일 6자회담이 올 상반기 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3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음.

##### ● 퍼트레이어스 美CIA 국장 주말께 방한(2/8)

-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번 주말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퍼트레이어스 국장이 이번 주말께 한국을 방문해 우리 안보 및 정보담당 부처 책임자들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동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지난해 9월 취임한 퍼트레이어스 국장이 주요국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퍼트레이어스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과 만나 북한 정세에 관한 미국의 평가를 설명하고 대북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퍼트레이어스 국장은 이번 방한 일정에 맞춰 일본과 중국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중부군 사령관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퍼트레이어스 국장은 이라크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미국의 전쟁영웅으로 부상한 인물로 한때 잠재적 대선 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언 파네타 전 CIA 국장 후임 정보기관 수장으로 임명했음.

### ● "한-러, 6자회담 조속 재개위해 노력키로"(2/9)

-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과정 복귀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임 본부장은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한 뒤 "양측이 6자회담의 조기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임 본부장과 마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 영빈관에서 공식 회담을 연 뒤 곧이어 만찬을 함께 했음. 양측의 회동은 오후 7시께 끝났음. 이날 회담은 지난해 말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차관에서 마르굴로프 차관으로 교체된 뒤 양국 수석대표 간 상견례를 겸해 이루어졌음.
-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변화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김 위원장 사망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음. 한국 측은 특히 북한이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인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의 사전 조치를 서둘러 이행하고 올바른 요건하에서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러시아 측은 북한의 사전 조치 이행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가 계속 지체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련국들이 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이날 한러 수석대표 회담은 최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간 교차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음. 이날 임 본부장과 회담에 앞서 마르굴로프 차관이 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났음. 1일에는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모스크바로 날아와 마르굴로프 차관과 회동했음. 지난달 17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임 본부장, 데이비스 특별대표,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수석대표 회담



이 열렸음. 스기야마 국장은 조만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마르굴로프 차관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3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음.

### ● 美신임 태평양사령관 "北권력승계로 우려 가중"(종합)(2/10)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차기 태평양군 사령관 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최근의 리더십 변화로 그런 우려가 가중됐다"고 말했다. 라클리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 권력승계와 관련, 이같이 지적한 뒤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 태평양군 사령부의 최대 도전 과제로 북한을 지목하며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권력승계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또 취임 후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질문에도 역내 억지력 확보와 함께 미국 내 관련 당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위시한 새로운 체제는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태평양지역을 넘어선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확산의 당사자로 판명됐고, 이란 등과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클리어 지명자는 "북한이 국제사회 바깥에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라면서 "사령관으로 취임하면 예측·경고 시스템 보안을 위해 정보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 대비태세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BMDR)'와 관련, "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 라클리어 지명자는 한국과의 국방협력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성공적"이라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역내안보 기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언급, "북한 화력의 사정거리 외부로 장병과 장비의 대다수를 이전함으로써 방어력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또 비용절감, 군사대비태세 강화 등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찰기 U2 퇴역으로 인한 감시정찰 활동 약화 우려에 대해 "국방전략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태평양군사령부의 감시정찰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U2 전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내 미군 유해 발굴 재개와 관련, "이는 북핵 6자회담이나 한반도 안정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 ● 고든 "북한, 예측 어려운게 큰 리스크"(2/10)

- 미국 정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정책기획실장과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등을 역임한 데이비드 고든 유라시아 그룹 글로벌 매크로 분석 소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험요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고든 소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 한국무역협회 건물에서 열린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 주최 '2012년 국제정세 주요 위험요소 전망'세미나에서 "북한 관련 위험 요소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무모한 도발 가능성과 김정은 체제의 존속 여부로 구분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그는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 첫번째 원칙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한국이나 미국은 물론, 북한이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위험요소들은 유럽 재정위기나 이란 사태와는 달리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음.
- 고든 소장은 북한 정권이 국제 정세를 오판하거나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이나 한국 내 미국 군사기지, 주변국에 대한 우발적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또 김정은 체제가 존속할지 여부도 리스크로 볼 수 있다면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했지만 지금은 대중 앞에 등장한 지 18개월 밖에 안된 김정은과 그 주변 인물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내부 분열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음. 한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북한에서 안정적인 권력이양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한국이나 미국 정부 역시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음. 또 주변국들이 북한 정책수립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음.
- 고든 소장은 유럽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높은 세금과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급등, 수요 및 생산성 감소, 긴급구제 조건 불이행 가능성 증가 등으로 상황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음.
- 그는 이어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협에 대해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주변 아랍국가 및 서방국가들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20-30%로 아직은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음. 또 주변국들도 무력을 통한 해결보다는 유엔이나 유럽연합, 미국에서 발의한 대(對)이란 제재안을 통한 해결책 등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란산 원유수출 금지 등 국제사회의 공조로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얻었다고 말했음.



● "北, 1998년 우라늄 농축 착수" <日紙> (2/11)

- 북한이 알려진 것보다 2년 빠른 1998년에 우라늄 농축 핵개발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활동에 밝은 북수의 외교 관계자와 핵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1990년대 후반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와 접촉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등을 입수했고, 1998년 4월 핵무기 원료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물질인 6불화우라늄(UF6)을 시험 제작한 뒤 이를 칸 박사에게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파키스탄이 북한산 노동 미사일(파키스탄명 가우리)을 도입했다가 대금이 밀리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음. 1998년은 북한이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로 플루토늄 핵개발을 중단한 뒤 1997년 그 대가로 경수로 건설에 착수한 직후임.
- 앞서 워싱턴포스트도 북한이 1998년 파키스탄에서 핵기술을 확보하려고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 달러와 보석 등 뇌물을 건넸다고 북한이 1998년 7월에 칸 박사에게 보낸 공문을 입수해 지난해 7월 보도했음.
- 북한은 그동안 2009년 4월 IAEA 사찰단을 추방한 뒤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고,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2천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영변의 농축 시설을 보여줬음.

나. 미·북 관계

● "美 작년 대북수출액 전년比 크게 증가" (2/11)

- 2011년 미국의 대북한 수출액이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의 발표를 인용해 11일 보도했음. 방송에 따르면 2011년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상품은 총 940만 달러 규모였음. 이는 2010년도의 190만 달러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것임.
- 최대 수출품목은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보낸 구호물품으로 전체 수출액의 95%에 달했음. 이밖에 밀가루와 녹말을 비롯한 제빵 재료와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종이류도 주요 수출품으로 분류됐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 2010년의 대북 수출품은 주로 밀가루와 옥수수 등 곡물류였음.

다. 일·북 관계

● "北, 日에 북송 일본인 처 일시 귀국 제안" (2/8)

- 북한이 일본측에 1950~1980년대 재일동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이른바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재개 등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북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중국에서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났을 때 요도



- 호 납치범 송환이나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재개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일본측에는 식민지 시기에 강제 연행한 조선인 유골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음. 하지만 일본이 집착하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 8월의 북일 실무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일본측이 백지화했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측은 오는 9월 '북일 평양 선언' 서명 10년을 앞두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되풀이해 요구하는 일본을 견제하고, 북일관계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일본이 자세를 누그러뜨릴 확률은 낮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일본 니가타(新潟)와 북한 청진을 잇는 만경봉호 등을 타고 재일동포 9만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고, 이중 1천800여명은 일본인 아내였음. 북송 일본인 처는 1997년과 1998년, 2000년 3차례에 걸쳐 북일 적십자사를 통해 일본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지만, 2002년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중단됐음.

## 라. 기 타

### ● <핵제재에 동병상련?...北 이란 편들기>(2/6)

-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는 이란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음.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에 관한 이란의 입장을 신속히 전해왔는데 최근 미-이란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이란 편들기가 심화되는 모양새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란이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을 꿋꿋이 수호해나가고 있다"며 "반이란 적대세력이 아무리 합세해 달려들어도 이란 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최근 이란이 원유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벌인 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이란이)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다"며 "이란 해군은 그 어떤 제국주의의 압력과 책동에도 강하게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 반면 노동신문은 미국을 겨냥해선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 활동을 걸고 들면서 이 나라를 국제무대에서 완전고립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금융 및 원유제재 조치를 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이란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가 지난 3일 "이란은 핵개발을 가로막으려는 서방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고 보도했음.
-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중앙통신은 4일



러시아 관리가 "서방의 이란 제재는 절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음.

- 북한이 이처럼 이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맞서는 국가라는 동병상련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한 매체가 이란의 핵활동을 '평화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도 평화적 목적이라고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북한과 이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사망한 뒤에도 외교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오르자 축전을 보냈고, 김 부위원장도 새해 들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 연하장과 축전을 잇따라 보내 화답했음.

● UN "北인구 2030년 2천618만 명...7% 증가"(2/7)

-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소폭 증가한 2천618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자료를 인용해 7일 전했다.
- 경제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1 아시아태평양 인구와 개발 지수에 따르면 2011년 중순 북한인구는 총 2천445만1천명으로 추산돼 전체 58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19위였음. 또 북한의 출산율은 현재 수준의 인구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기준인 2.1명에 못 미치는 2.0명이었고, 14세 미만 인구 증가율은 -1.4%를 기록해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7% 늘어난 2천61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음.
- 2011년 남한인구는 북한보다 배가 많은 4천839만1천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현재보다 4% 정도 늘어난 5천33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사회위원회는 예상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육사 교수, 美 웨스트포인트 강단 선다>(2/7)

-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 정규 사관학교로 재개교한 지 60년 만에 미국 웨스트포인트(육사)에 교환교수를 파견함. 미 육사 교장인 데이비드 헌튼 중장은 지난달 16일 한국 육사를 처음으로 방문, 박종선 교장(중장)과 '한·미 육사간 동반자관계 선언서'에 서명한 뒤 양국 육사간 교환교수제 도입을 선언했다고 육군이 7일 밝혔음.
- 양국 육사 교장은 미국 국방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교환교수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임. 미측은 육군성의 법무 검토



작업을 마치고 현재 국방부의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3~4월  
 께 MOU가 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반기에 MOU가 체결되면 올해  
 하반기에 교환교수를 상호 파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육군의 한 관  
 계자는 전했다.

- 양국은 1999년부터 육사 교환교수제 운용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라크전  
 발발 등으로 중단됐음. 작년 11월 실무자급회의를 열어 교환교수제 운  
 용에 의견을 일치한 후 지난달 16일 최종 합의했음.
- 육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 육사의 200여년간 축적된 교육철학과 교육기  
 법을 생도교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방법 등에 대한 비교  
 연구로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음. 그는 "학술교류와 전문 확  
 대를 통한 교수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양국 육군간 우호협력  
 증진과 한미동맹 강화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음.
- 양국 육사 교환교수 파견 기간은 1년 단위이며, 주거 시설은 상호 제공  
 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는 1967년부터 미 육사에 위탁교육생을  
 보내 모두 10명이 졸업했으며, 현재 2명은 위탁교육 중임. 육사는 1951  
 년 4년제 정규 사관학교로 재개교했음.
- 양국은 육사와 달리 해사와 공사에 대해서는 각각 1993년, 1997년부터  
 교환교수제를 운용 중임.
- 한편 우리나라 육사와 해사, 공사는 각 군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교환교수를 상호 파견 운용함. 육사는 해사와 공사에, 해사는  
 육사와 공사에, 공사는 육사와 해사에 각각 교환교수 1명씩을 파견할 계  
 획임.

#### ● 외교부 "美 해병대 순환배치 논의사항 없다"(2/7)

- 외교통상부는 7일 "미 해병대의 순환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논의되  
 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음.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  
 레브리핑에서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순  
 환근무할 수 있다는 국내 한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부인했음.
- 조 대변인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외교협약에 조속하게 응해달라고 일본측에 촉구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계속 답변이 없으면 중재로 넘어가는 가능성을 열어놓  
 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는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서 어떻  
 게 협력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  
 고 있다"고 말했음. 임 본부장은 신임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  
 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등을 만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  
 했음.
- 조 대변인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6자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부분, 일종의 여건조성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제의  
 했고, 그동안 남북 접촉과 미북 간 접촉을 통해 북한도 우리 측의 입장



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8일부터 1주일간 체코와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방문, 각국 외교부 차관 혹은 차관보를 만나 양자 정책협의회의를 가짐.

● **샤프 전 사령관 "한미, 군사 FTA 필요"(2/7)**

- 한국과 미국간에 군사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국방전략 자문회사인 모니터 내셔널시큐리티의 존 프라이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최근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보낸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두 사람은 "군수업체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한국 업체들의 미 국방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한미 FTA를 모델 삼아 양국간 군사 FTA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필요한 첨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첨단 기술이 잠재적 경쟁대상국에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렇지만 이런 보호조항은 영국이나 호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음.
- 이들은 또 한국이 다른 곳에서 무기를 조달할 경우 미국의 일자리에도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의 무기구매 단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더 많은 한국산 제품 구매를 추진하거나 최소한 한국이 미국에 좀 더 많은 무기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김 美대사 9일 오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예방(2/8)**

-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9일 오전 11시20분 경기도청을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남.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부임한 성김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예방인사차 김 지사와의 접견을 요청해 이뤄졌음. 성김 대사와 김 지사는 오찬을 함께 하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경기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임.
-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100번째 투자유치에 성공한 김 지사의 국외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도 성김 대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와 미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김 대사는 오찬 후 평택시 송탄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할 예정임.

● **〈구미시민 "미군 민간인 오폭사건 재조명해야〉(2/8)**

- 1950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미군의 민간인 오폭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위령탑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구미에서 미군의 오폭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현재 형곡동에 속하는 시무실마을과 사창마을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16일 오전 10



시계 미군기 8~9대가 이 일대를 폭격하는 바람에 30여 가구 130여명의 주민과 피란민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음. 그러나 시대 분위기 때문에 부모, 자식, 친지를 잃은 주민은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 하소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을 간직하고 살았음.

- 이 사건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1999년 충북 영동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불거지면서부터임. 한국전쟁 당시 오폭이나 학살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형곡동 민간인 오폭사건도 알려지기 시작했음. 그러나 이 사건은 2006년 주민이 '과거사·진실 화해위원회'에 진정서를 넣고서야 조사가 시작됐음. 그나마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2009년이었음. 조사를 마친 '과거사·진실 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30일 형곡동 일대에 미군의 폭격으로 최소한 29명이 사망했다고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위령사업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음. 또 사과나 피해보상과 관련해 미국측과 협상하고 부상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역사기록을 수정해 등재하라고 권고했음.
- 그럼에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음. '과거사·진실 화해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각 지자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앴음. 보상이나 명예회복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한 구미시민은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이 대부분 숨지고 70대 이상 노인 20여명만 남았다"며 "위령탑을 건립해 억울한 주민의 한을 달래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음. 손홍섭 구미시의원은 "암울했던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피해 주민과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 수 있도록 위령탑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 <美 록히드마틴, F-X사업 거론했다 '혼쭐'>(2/8)

- 차기전투기(F-X)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F-35 전투기 판매를 언급했다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음. 8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의 스테phen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한국은 F-35 개발에 자금을 대지 않았음에도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음. 그는 애글린 미 공군기지 인근 에메랄드 코스트지역에서 F-35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언론간담회를 통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오브라이언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지난 7일 방사청 전투기사업팀의 감시망에 포착됐음. 전투기사업팀은 F-X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동향과 외신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오브라이언 부사장의 발언이 서류심사와 현지 시험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즉각 해명을 요구했음.
- 이에 록히드마틴의 한국 에이전트가 당일 방사청을 방문해 "미국 신문 기자가 부사장의 발언을 잘못 듣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함. 그는



- "기사는 오보"라고 거듭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음.
-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록히드마틴 본사는 이날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인터뷰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오브리언 부사장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록히드마틴측은 10일째 국내 무기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들에게도 외신 보도가 잘못됐음을 설명하고, 이달 중 본사 고위관계자를 한국에 보내 당시 인터뷰 발언을 해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F-X 사업에 참여한 한 국외 업체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방사청은 '치고 빠지기식'의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나눠준 제안요청서를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스틸스급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에는 미국의 록히드마틴(F-35)과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타이푼) 등이 참여할 예정임.
  - 방사청은 비용, 작전 요구성능(ROC) 충족성, 운용적합성(상호운용성), 경제·기술적 편익 등 크게 4가지 기준에 따른 150개 항목을 평가해 오는 10월 F-X 기종을 선정할 계획임.
- **성김 美대사 "한미 FTA는 양국에 이익되는 협정"(2/9)**
-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9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 김문수 지사와 한미 FTA 및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김 대사는 면담 자리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 이익이 되는 좋은 협정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음. 김 대사는 "(FTA 협상에 참여한) 한미 당사자들을 높게 평가함.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나도)김 대사와 같은 생각인데 국내 정치가 미묘하게 돌아가 걱정"이라고 했음.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관련해 김 대사는 "예전에 한미동맹을 위해 기지 재배치와 관련한 직접적인 일을 했었다"며 "당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전쟁 역지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음. 그는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통폐합해 허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방어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음.
  - 김 대사는 김 지사와 오찬을 갖은 뒤 평택시 송탄국제교류센터를 방문했음.
- **한·미 군사기술보안회의 하와이서 개최(2/9)**
- 제3차 한·미 군사기술보안회의(DTSCM)가 9~1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림. 2010년 처음 열린 DTSCM은 군사기술의 국내 활용과 이를 제3국에 수출 시 통제기법 등을 논의하는 한·미간 정례적인 협의체임.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과 제임스 허시 미 국방부 산하 기술보안청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해 제기된 F-15K 전투기





- 의 군사장비 기술도용 논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미측은 지난해 6월 제2차 회의에서 F-15K의 핵심부품인 '타이거 아이'를 한국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양국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의 방산협력뿐 아니라 기술교류와 수출 통제 등을 위한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호 합의하에 개최하기로 한 회의"면서 "F-15K 기술도용 논란은 미측에서 조사를 끝낸 이후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나. 한·중 관계

##### ● 중국 내 작년말 기준 수감 한국인 313명(2/6)

-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3명인 것으로 확인됐음. 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선양(瀋陽)으로 167명이고 칭다오(靑島) 70명,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각각 24명, 상하이 17명 등이며 전체 수감자 수는 2010년과 비교할 때 3% 늘었음. 이들 가운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기수가 83%이며 마약, 밀출국 알선, 사기, 밀수, 강도, 폭행, 살인 등이 주된 범죄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 대사관 측은 한국 내에 수감된 중국인 수는 2천여 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대사관 측은 작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사건·사고는 1천 934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6% 낮아졌다고 공개했음. 이중 한국인의 가해사건은 350건이고 피해사건은 1천584건임.
- 한국인의 가해사건은 선양(111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베이징(70건), 상하이(58건), 칭다오(51건) 순이었음.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밀수, 마약 등의 범죄가 주를 이뤘음. 피해사건은 칭다오(519건), 선양(289건), 베이징(267건) 순이었음. 폭행, 절도, 납치 감금, 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대다수였음. 한국인의 중국 내 불법체류는 선양, 베이징, 상하이에서 주로 적발됐음.
- 대사관 측은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사망한 한국인 수는 118명이었고 이중 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한편 대사관 측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13일 발생한 주중 베이징 대사관에 대한 공기총 총격으로 추정되는 쇠구슬 공격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이 계속 수사 중이며 지켜봐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확인했음.

##### ● 코트라, 中에 상임이사 체제 본부 가동(2/6)

- 코트라가 중국 지역에 상임이사를 투입한 중국지역본부를 설립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음. 박진형 신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6일 베이징(北京)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중국시장 공략을 강화해 한국 경제성장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인사권, 예산,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본부 체제가 갖춰져 앞으로



- 중국 내 17개 공관이 통합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코트라는 본부 체제를 중국에 처음 도입했음.
- 중국 내 코트라 공관은 화북의 베이징(北京), 다롄(大連), 선양(瀋陽), 칭다오(靑島), 정저우(鄭州), 시안(西安), 화동의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충칭(重慶), 청두(成都), 화남의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창사(長沙), 홍콩, 타이베이 등이며 베이징 소재 지역본부의 지휘를 받게 됨.
  - 박 본부장은 먼저 중국 경제성장이 수출에서 내수로 재편,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륙의 성(省)과 시(市)에 무역관을 전진 배치 또는 확대 개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북, 화동, 화남 등 3개 권역별로 현지에 특화된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대외 관계기관에 무역관을 개방해 내륙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는 아울러 유통분야는 물론 환경 등의 신산업분야, 다국적 기업과 중국 대형기업과의 협력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지방 성·시와 협력사업을 확대해 양국 간 협력 모델을 다양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박 본부장은 또 올해가 한중수교 20주년인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세미나 등을 계기로 유망 프로젝트 상담회 등의 복합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대북 사업 역시 침체한 상태이지만 정부와 협력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연결하는 사업을 서서히 시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 中감시선 가거초 해역서 퇴거 조치(종합)(2/6)

- 중국 해양감시선(해감·海監) 51호가 이어도에 이어 두 번째 해양과학 기지인 신안군 '가거초(可居礁)' 인근 해역을 순찰하다 해경에 발각돼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오전 7시 50분께 가거초 기지를 순회하던 1천급 해감 51호를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인 1506함이 발견, 퇴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 이 해역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외국의 관공선이나 군함이 항행하고자 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해감 51호는 2시간 만인 오전 9시 50분께 EEZ 밖으로 물러났음. 해경의 한 관계자는 "당시 가거초 기지를 한 바퀴 빙 도는 중국 감시선을 발견해 항해 의도를 물었지만 응답이 없어 순시, 조사 목적 등 불순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보고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 중국은 지난해 말 이어도와 가거초 부근 해역 등 동중국해에 대한 순찰 활동을 위해 대형함을 투입한다는 발표를 했음.
- 사업비 100억 원을 들인 가거초 기지는 가거도 서쪽으로 47km 떨어진 가거초 수심 15m 아래에 지난 2009년 10월 완공됐음. 구조물 전체 높이는 51m, 물 위로는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인 26m가 드러나 있음. 면적은 286㎡로 이어도 기지(1천345㎡)의 4분의 1 정도이지만 과학기



지로서의 기능은 향상됐음. 21m 높이의 파도와 초속 40m에 이르는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음.

###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풍성'>(2/8)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올해 한중 양국이 공동 개최를 결정한 기념행사만 45건에 달하고 민간에서도 다채로운 경제·사회·문화행사를 계획 중임.
- 21세기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8일 오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하는 수교 20주년 기념 신년인사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민간 차원의 첫 기념행사임. 이날 행사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과 이수성 전 국무총리,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 등 한국측 인사 300여명과 장신썬(張愼<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와 대사관 간부, 중국기업체 대표 등 중국측 인사 300여명이 참석함. 21세기 한중교류협회와 중국대사관은 한중 교류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 특별공로패 등을 수여할 예정임. 21세기 한중교류협회는 200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룽지(朱鎔基) 당시 중국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설립됐으며 2001년부터 매년 '한·중 지도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민간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왔음.
- 양국 정부도 다음 달 정부 고위층 교류행사를 시작으로 ▲정당간 고위층 대화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회의 ▲한중 무역전람회 ▲과학기술 고위층 포럼 ▲1천명 규모의 청소년 상호 방문 ▲어린이 사생대회 ▲영화주간 ▲노래자랑 등 45건의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를 잡아놓고 있음. 정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도 다양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기념행사는 정부가 마련한 공식 로고와 포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한국과 중국은 20년 전인 1992년 8월24일 베이징에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

### ● 한중 FTA 논의 가시화...공식절차 착수(종합2보)(2/8)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첫 공식절차가 시작돼 4,5월 중 협상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음.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 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음. 공청회는 24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됨. 이 조정관은 "새롭게 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는 공청회 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업종별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정관은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국은 협상 개시 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의 협의를 끝낸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임. 협상 개시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만 잘 진행된다면 3월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의 성사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서 지난 6일 한중 FTA 협상개시 시기를 "5월 전에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양국이 5월 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상반기 중 첫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이 조정관은 한미 FTA 발효준비와 관련해선 "지난주 고위급 회의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척이 있었음. 고위급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만큼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업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 일례로 현대·기아차는 브라질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30%의 내국세를 인상하는 바람에 현지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음. 대만은 국내 선거를 앞두고 자국 생산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中, 폐놀오염 조사차 韓화물선 억류(종합)(2/10)

- 중국 당국이 장쑤(江蘇)성 창장(長江) 하류에서의 폐놀 오염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음. 통신은 장쑤성 정부가 지난 3일 성(省)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폐놀이 검출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면서 당국은 전장(鎮江)시에 정박했던 한국 선박이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탓에 화학물질이 창장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음. 이번 폐놀 오염 사고와 관련해 장쑤성, 전장시 등은 물론 해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해양국, 검역 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통신은 장쑤성 난통(南通)시에 정박 중인 해당 한국 선박에 자사 기자들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난통과 전장시는 창장 하류에 있는 인접 도시임.
- 앞서 지난 7일 전장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통지문에서 지난 3일부터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결과 수돗물에 폐놀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음. 신화통신은 난통시와 전장시가 실시한 4일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놀 수치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음. 폐놀 오염 소식이 알려지면서 난통시와 상하이시 등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생수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대형 할인매장의 생수 진열대가 텅텅 비는 일이 잦아졌음. 이에 해당 화물선이 소속된 한국 기업 측은 (화학물질을 창장에 배출했



다는 의혹 제기)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련 보험 회사들과 대응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상하이(上海) 한국총영사관 측도 중국 당국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 ● 中, 韓선박에 폐놀오염 책임 36억 원 보증금 요구(2/12)

- 중국 우한(武漢)해사법원이 장쑤(江蘇)성 창장(長江) 하류에서의 폐놀 오염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국 화물선에 대한 억류 결정과 더불어 2천 60만 위안(36억7천751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음. 12일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3일 성(省)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폐놀이 검출돼 조사한 결과 저장성 전장(鎮江)시에 정박했던 한국 화물선인 글로리아호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돼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도했음. 지난 7일 전장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통지문에서 지난 3일부터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폐놀 오염을 확인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음.
- 폐놀 오염이 신고된 직후 지방정부인 장쑤성, 전장시 등은 물론 해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해양국, 검역 당국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음. 전장시의 부샤오팡(卜曉放) 대변인은 관련 당국과의 철저한 초기 조사를 거쳐 글로리아호에 오염물질 배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우한 해사법원에 억류 조치와 재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오더성 전장시 해사국 부국장은 "문제의 오염원이 글로리아호에서 흘러나온 증거를 모았다"고 확인했음.
- 신화통신은 그러나 전장시 등이 지난 4일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놀 수치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음. 그러나 글로리아호 측은 (중국 측의 오염물질 배출 주장에)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인면서도 관련 보험회사들과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음.

#### 다. 한·일 관계

##### ● 日우익단체 "한국 공관 앞에 다케시마비 세우겠다"(2/7)

- 한국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를 세우자 일본 보수단체가 주일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일본 단체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관련 웹사이트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도쿄 미나미아자부(南麻布)의 한국대사관 앞 도로에 이른바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 비'를 세우겠다고 관할 지자체인 미나토(港)구에 신청서를 제출했음.
- 주일 한국대사관은 현재 신주쿠(新宿)구의 요쓰야(四谷) 임시 공관에 입주해있고, 내년에 재건축이 끝나는 대로 미나미아자부로 돌아갈 계획임.
- 이 단체는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 한국영사관 앞 도로에도 비석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석은 '1m50cm×20cm×20cm' 크기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라는 내용을 새길 예정이고, 시마네(島根)현이 정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에 맞춰 건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음. 재특회 관계자는 웹사이트 등에 한국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세운 데 대한 보복으로 다케시마 비석 건립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했음.

- 미나토구 측은 지난달 26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국토교통성, 외무성 등 일본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답변 시점을 2월초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음.
- 재특회는 2009년 12월 교토에 있는 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산기로 "북한의 간첩 양성소"라거나 "일본에서 나가라. 간첩의 아이들"이라고 외치며 수업을 방해했다가 간부들이 구속된 일본의 보수우익단체임.

#### ● 日, '동해' 병기 반대 재확인(2/10)

- 일본 정부는 10일 한국의 '동해' 명칭 병기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일본 정부는 요코쿠메 가쓰히토 중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공인된 명칭"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 답변서는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이 추진한 미국 교과서의 '동해' 및 '일본해' 명칭 병기 법안은 일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라. 미·일 관계

#### ● "美日, 中 겨냥 방위협력지침 개정 추진"(2/7)

-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오는 4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양국은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임무와 역할분담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무·국방 당국 심의관급 협의에서도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음. 주요 내용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섬 침공, 동북아시아에서 미군 투입에 장애가 되는 중국의 '접근저지' 전략에 대한 대응 등임. 방위협력지침상의 '평시 협력'을 확충해 정보, 감시, 정찰을 강화하고,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며, 해상 침공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 또 양국이 주일 미군 기지의 공동 사용을 확대해 공동대처 능력을 높여 미군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음.
- 양국은 안전보장 공동선언에 방위 지침의 개정을 명기하는 외에 호주,



아세안과의 대(對) 중국 포위망 구축, 세계 규모의 해양안정화 대책 등도 포함할 전망이다.

-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양국 안보체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1978년 만들어졌으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이를 개정해 주변사태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음. 미일 양국의 주체적 군사활동에서의 협력, 보급과 수송 등 후방지원을 포함한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 등을 규정했음.

● "美, 日에 후텐마기지 보수 비용 요구" <日紙> (2/7)

- 미국 정부가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군 재편 로드맵의 재검토와 관련, 일본에 후텐마 기지의 보수 비용을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미국이 주일 미군 재편 협상에서 후텐마 기지의 계속 사용을 염두에 두고 항공기 계류장과 활주로 정비 등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 규모를 애초 8천 명에서 4천70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음. 미국은 나머지 3천300명을 호주와 필리핀 등의 미 기지로 로테이션 식으로 파견하기로 했음. 미국은 또 이들 가운데 약 1천500명을 일본 본토의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는 주일 미군 이와쿠니(岩國)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을 일본에 타진했음. 이와 함께 한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 등으로 해병 일부를 이전하는 안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미 간에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일부를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하는 협의는 없다"고 부인했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도 "일미 간에 이와쿠니 기지로의 해병대 이전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
- 미 해병의 이와쿠니 기지 이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자치단체인 야마구치(山口)현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마구치현의 니이 세키나리(二井關成) 지사는 "당돌한 이야기로, 국가에 불신감을 품고 있음. (미국의 타진을) 거부하기 바란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 노다 총리는 양국이 미 해병의 괄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분리하기로 함으로써 후텐마 기지 이전이 백지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후텐마가 고정화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괄으로 이전하는 미 해병의 규모가 축소된 만큼 일본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의 이전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60억9천만 달러의 감액을 요구하기로 했음.
-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합의한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8천 명과 가족을 괄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이 60억9천만 달러, 미국이 41억8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었음. 미국과 일본은 이날부터 워싱턴에서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의 재검토와 관련, 외교·국방 실무자급 협의를 시작했다.



### ● 美日 "오키나와 미 해병대 우선 괌 이전" 발표(2/8)

- 미일 양국은 8일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를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해병대의 괌 이전과 그 결과인 가테나(嘉手納) 남쪽의 토지 반환을 후텐마 기지의 대체 시설 건설과 분리하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오키나와 미군의 영향을 줄이는 한편, 후텐마 기지의 대체 시설을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에 건설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다만 괌으로 옮길 미 해병대의 규모는 앞으로 논의 과제로 남겨뒀음. 양국은 "괌에 이전하는 해병대의 부대 구성이나 수(數)를 수정하고 있지만, 오키나와에 잔류하는 해병대 규모는 2006년 미일 합의에 따르겠다"며 "앞으로 수주나 수개월간 여러 가지 과제를 다룰 것"이라고 못박았음. 괌 이전 대상인 미 해병대 8천명 중 일부를 일본 국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여지를 열어둔 것임. 다만 오키나와 해병대 규모는 2006년에 합의한 대로 1만명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이 명백해졌음.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해병대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분리할 경우 후텐마 기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도 후텐마 기지의 고정화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발표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양국의 협의를 주시하겠다"고 말했고, 미군 해병대의 괌 이전은 환영하면서도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 헤노코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외 이전을 다시한번 요구했음. 앞서 미일 양국은 2006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천명과 가족을 괌으로 옮기고, 후텐마 기지는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현 내 이전' 반대에 부딪혔음.
- 일본 언론은 미일 양국이 괌으로는 4천700명만 옮기고, 1천500명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미군 기지, 나머지 1천800명은 하와이와 호주 등지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미일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음.

### ● "주일 미군 재편은 중국에 대한 대응"(2/9)

- 미국의 주일 미군 재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선상(線上)동맹'을 토대로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해왔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면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졌다면서 이렇게 전했음. 신문은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 가까운 오키나와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둘 경우 유사시 일격에 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전직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음.
-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 '망상(網狀)거점'을 구축하려 하





고 있음.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괌이 허브 기지이며, 오키나와 해병대를 호주, 필리핀 등으로 분산 배치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임. 미 안보 고위당국자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측에 사태의 긴박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오키나와 해병대가 호주 등으로 이전할 경우 일본 주변에서의 위기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며,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음. 신문은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국방력 강화 등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국방예산의 추가 염출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 한편, 미국과 일본은 8일 밤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과 관련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로 이전하는 현행 계획이 유일하고, 유효한 추진 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또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오키나와현 남부에 있는 미군의 5개 시설·구역 반환을 후텐마 기지 이전과 분리해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은 수개월 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2006년 합의했던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에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8천 명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축소해 4천700명만 옮기기로 했으며, 나머지 3천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등의 미 기지로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 마. 중·일 관계

### ● 日방위研 "中 해양권의 확보 위해 군사력 강화"(2/10)

-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중국이 해양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10일 NHK 방송에 의하면 일본 방위연구소는 중국의 군사 동향을 상세히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했다. 방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경제발전과 군사전략 분야에서 해양에의 관심과 진출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해양 권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기동성 높은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방위연구소는 "중국은 근해에서의 작전 능력 향상의 의도와 목표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투명화를 요구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제시한 데 대해 중국이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작전능력의 과시에 의한 억지력의 강화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중국은 비타협적 논리와 수단으로 이익 획득을 도모하고 있지만, 증대하는 힘을 국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평화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분기점에서 있다"면서 "해양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이 시급적이다"라고 지적했다.



## 바. 미·중 관계

### ● 中시진핑, 방미 앞서 美바이든과 전화통화(2/8)

-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7일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인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양자관계를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음. 시 부주석은 오는 13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예정임.
- 시 부주석은 먼저 바이든 부통령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수년간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을 전했음. 시 부주석은 그러면서 "이번 방미는 지난해 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바탕에서 중미 양국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촉진해가기 위해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시 부주석은 이어 "(방미 기간에) 미국 측과 양자관계, 그리고 여타 주요 이슈들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되길 기대하며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미국 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도 시 부주석의 방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양측이 미중 관계와 다른 공통 관심사에 대해 깊은 수준의 논의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회답했음.
-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미중 관계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시 부주석의 방미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의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부주석이 방미 기간에 워싱턴, 아이오와 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 ● <中충칭부시장 美망명시도설, 권력투쟁 산물인가>(2/9)

- 중국에서 '치안 영웅'으로 통하는 왕리쥘(王立軍·53) 충칭시 부시장의 미국 망명시도설이 중국 지도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갖가지 관측을 낳고 있음. 왕 부시장은 그동안 겸직하던 공안국장직에서 최근 물러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가를 낸 상황에서 9일 홍콩 언론을 통해 그의 미 총영사관 망명시도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는 양상임. 특히 미 국무부가 왕 부시장의 미 총영사관 '방문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갑작스럽게 그의 치적을 기리는 기사를 크게 보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관영 중경일보(重慶日報)는 이날 왕 부시장이 과거 겸직하던 공안국장 시절 3년간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눈부신 치적을 쌓았다고 여러 면을 털어 보도한 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도 이를 인용해 전했다. 중경일보는 왕리쥘이 2009년부터 '평화로운 충칭' 작전으로 마피아 스타일의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운 덕분에 마침내 충칭에 평화가 찾아왔다고도 했음. 신



문은 충칭이 과거에는 총기, 마약, 매춘, 도박 등의 범죄에 찌들고 기소 중지자와 미제사건이 넘쳐나던 곳이었으나 왕리진이 공안국장에 취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일소됐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아울러 왕리진이 추진한 범죄와의 전쟁으로 500여 개의 폭력 조직이 해체됐고 5천700명의 조직원이 체포됐으며 그 가운데 35%가 기소됐을 뿐더러 이를 두둔 하던 공무원 77명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중경일보는 이어 최근 몇 년 새 충칭에서 교통사고, 거리 범죄, 화재, 안전사고도 현격히 줄어들었다며 그 공을 왕리진에게 돌렸음. 또 충칭 시민 중 97%가 충칭의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도 전했다.

- 이런 가운데 왕 부시장이 최근 충칭 부근의 쓰촨(四川)성 성도인 청두(成都)의 미국 총영사관을 찾아 면담하고서 스스로 돌아갔다고 미국 국무부가 '확인'해 관심을 끌고 있음. 일각에서는 왕 부시장이 1급 비밀문서를 들고 미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했으며 이는 중국 내 권력 투쟁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됨. 왕리진은 청두 소재 미 총영사관을 방문한 뒤 공산당 감찰 기구인 기율조사위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음.
- '충칭 포청천'으로도 불리는 왕리진은 태자당(太子黨) 소속으로 통하는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 서기의 '수족'과 같은 인물로 분류됨. 보시라이 서기는 오는 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기 위해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동맹) 소속의 광둥(廣東)성 왕양(汪洋) 당서기와 치열한 '공 썩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는 이미 낙점됐으나 나머지 7명이 더 선정돼야 함. 따라서 이를 두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중심의 공청단, 쑹칭홍(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의 태자당, 여전한 현실 권력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 등의 3대 세력 간에 힘겨루기가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후 주석을 비롯한 제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이 될 다음 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5차 전체회의 개막을 앞두고 3대 세력 간의 물밑 쟁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임.
- 왕리진의 미국 망명시도설은 그런 배경에서 나옴. 아울러 왕리진의 최근 석연치 않은 행보는 태자당과 여타 세력 간의 다툼에서 희생양이 된 데 따른 자기 방어적 행동이라는 관측도 있음. 이런 탓에 베이징 정가에서는 관영 매체들이 갑작스럽게 왕리진 치적을 띄우고 나선 것도 정치적 '내홍'을 감추려는 목적의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 中 "왕리진, 美영사관서 하루 체류" 확인(2/10)

- 중국이 왕리진(王立軍) 충칭(重慶)시 부시장의 청두(成都) 소재 미국 총영사관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9일 질문에 답



하는 형식으로 "왕 부시장이 6일 미 총영사관에 들어가 하루를 머물고 떠났다"고 밝혔음. 대변인실은 이어 "유관 부문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베이징 정가에서는 왕 부시장이 지난 7일 미 총영사관에서 나온 직후 공산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 조사반과 함께 모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 왕 부시장은 베이징(北京)의 기율검사위 청사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아울러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왕 부시장의 미 영사관 방문 사건에 대해 "이미 조용하게 해결됐다"고 언급했음. 추이 부부장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다음 주 방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8일 "왕 부시장이 이번주 초 청두 총영사관에서 면담을 요청했으며 이 면담은 예정된 것이었고 자발적으로 영사관을 떠났다"고 밝혔음. 놀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망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 中 "시진핑 방미, 동반자관계 쌓기가 목적"(2/10)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다음 주 미국 방문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쌓는 데 목적이 있다고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이 9일 밝혔음. 추이 부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 부주석의 방미에 대해 "중국과 미국 최고지도자 간의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시 부주석의 이번 방미 목적"이라고 소개했음.
- 추이 부부장은 아울러 "양국 모두 시 부주석의 방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 부주석은 미국 지도자들과 중미 관계는 물론 국제 및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브리핑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13~22일 미국, 아일랜드, 터키를 방문함. 추이 부부장은 시 부주석의 미국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방미에서 시 부주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하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접견할 예정임. 또 상·하원을 찾아 의회 지도자들과도 면담함. 시 부주석은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아이오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함. 아이오와주 방문은 테리 브랜스타드 아이오와 주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음.
- 27년 전 지방 간부 시절 가족사육 대표단을 이끌고 아이오와주 머스카틴을 찾았던 시 부주석은 해당 지역에서 '구면'의 인사들과 재회할 예정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10년 대만예의 무기판매와 남중국해 갈등으로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었으나 작년 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미를 통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호혜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추이 부부장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제재 결의안 무산과 관련해 "상임이사국 5개국이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여타 다른 나라들과 시리아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제사회가 선불리 무력을 쓰거나 개입해 특정국가의 정권교체를 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며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매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 <시진핑 방미> ① 권력이양 가도에 내부 다지기(2/12)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3일 미국 방문길에 오름. 시진핑 부주석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은 답방 차원임. 시 부주석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고서 현지시간으로 14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자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임. 이어 카운터 파트인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면담함. 아울러 미국 상·하원을 방문해 의회 지도자들과도 만남.
- 시 부주석은 그러고서 아이오와 주로 이동해 스킨십 외교 활동에 들어감. 테리 브랜스타드 아이오와 주지사의 초청으로 아이오와주 머스카틴을 찾음. 여기서 27년 전 지방간부 시절 가축 사육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지인'들과 회동함. 그는 아이오와 방문 이벤트를 통해 넥타이를 풀고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며 딱딱한 이미지의 후 주석과는 차별화해 인간적인 면모를 크게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일정을 보면 시 부주석의 이번 방미는 이전의 다른 해외 순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임. 그러나 올가을이면 베이징(北京)에서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 권력교체가 이뤄지고 큰 이변이 없다면 그 행사를 계기로 시 부주석이 후 주석의 자리를 이어받아 최고지도자로 오르는 점을 살펴보면 시 부주석의 이번 미국행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임. 무엇보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G2(주요 2개국)의 '임박한' 차기 지도자인 탓에 무게감이 느껴짐. 일각에서는 시 부주석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중 양국이 앞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정치, 외교, 안보, 환경, 인권, 자원, 한반도, 중동 문제 등을 다루갈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함.
- 미국도 시 부주석에 대한 의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기색이고 중국 역시 이번 방미 행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표정임. 주목할 대목은 중국이 시 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대내외의 '안정'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나아가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시 부주석의 미국 방문은 양국 간에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안정 속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싶어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추이 부부장은 구체적으로 후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초 합의한 상호 존중과 호혜 바탕의 동반자관계 구축 합의를 이행하는 게 이번 시 부주석 방미의 목적이라고도 했음.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강행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으로 1년 가까이 서먹했던 관계를 후진타오·오바마 회동으로 겨우 회복한 만큼 이런 분위기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임. 따라서 현재 위안화 환율과 각종 무역 갈등,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시위, 인권, 이란 핵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 미중 간에는 닢을 불힐 현안이 산적하지만 시 부주석은 이번 방미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됨.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인 미국과 조화로운 모습을 연출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얘기임.

- 그러나 이처럼 충돌이 불가피한 현안을 시 부주석이 비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일부 안전에 대해 미국 측은 정색하고 따지고 중국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그렇게 되면 대화와 협력 중심의 화해 분위기 조성엔 차질은 불가피함. 사실 중국 내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번 미국 방문은 시 부주석으로선 차기 최고지도자로서 '역량'을 평가받는 자리라는 지적임. 민감한 시기에 자칫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을 잘 조정해 중국의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하는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것임.
- 중국 내부에서 시 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숨죽이고 지켜보는 것은 이 때 문임. 이미 후 주석의 자리 계승을 '예약'한 시 부주석이 이번 방미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향후 권력교체 구도 속에서도 더욱더 유리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임. 계파로 본다면 시 부주석은 쑹칭훙(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의 태자당(太子黨)에 속하며, 후 국가주석 중심의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동맹), 그리고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과 갈등과 타협으로 당과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부주석의 방미 성과 여부가 3대 권력 축의 세력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여론의 향배도 주목거리임. 중국 역시 최근 몇 년 새 기존 신문·통신·방송 매체는 물론 인터넷과 웨이보가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면서 여론 역시 국가지도자들에게 중요해진 지 오래임. 따라서 시 부주석의 방미는 일거수일투족이 중국 내에서 주요 뉴스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사. 러·일 관계

### ● "러 핵폭격기 등 5대 日영공 접근 비행"(종합)(2/9)

-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러시아 공군기 5대가 한꺼번에 일본 영공에 접근해 일본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9일 보도했음. 일본을 긴장시킨 러시아 공군기의 초계 비행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함정과의 전투 도중 패색이 짙어지자 자폭을 택한 러시아 순양함 '바라크'호 침몰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음.



- ◇ "日 영공 인근서 16시간 비행" = 이타르타스 통신은 일본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8일 오전 9시(일본 현지시간) 2대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와 2대의 전투-정찰기 수호이(Su)-27, 장거리 전파탐지기 A-50 등 5대의 러시아 공군기가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섬 인근 상공을 선회 비행했음. 러시아 공군기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영공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일본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처럼 많은 러시아 공군기가 일본 상공을 선회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음. 방위성은 러시아 장거리 전파탐지기 A-50이 일본 상공에 출현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러시아 국방부도 9일 일본에 접한 태평양 공해 상공에서 Tu-95MS 폭격기 등이 참여한 초계 비행 훈련을 했다고 확인했음. 러시아 공군 대변인 블라디미르 브릭 대령은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에 "러시아 공군기들이 일본 열도 북쪽 태평양 공해 상공을 따라 초계 비행 훈련을 했다"며 "러시아 국경까지 비행하는 여러 단계에서 Su-27 전투기가 Tu-95MS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A-50은 공중 통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브릭 대변인은 "Tu-95MS가 모두 16시간을 비행했으며 중간에 2대의 일류신(И)-78로부터 공중 급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브릭은 그러면서 초계 비행 동안 F-15, F-16 등 일본과 한국 공군 소속 전투기 13대가 러시아 공군기들을 추적했다고 밝혔음. 그는 그러나 "모든 러시아 공군기들의 비행은 공해상 영공 이용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이뤄졌으며 다른 국가의 영공 침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 ◇ 러-일 전쟁 치욕의 날 앞두고 비행 훈련 = 러시아 공군기의 초계 비행은 때마침 러-일 관계에서 민감한 기념일들을 전후해 이루어져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음. 초계 비행 하루 전인 7일은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시위를 벌이는 '북방영토의 날'임. 9일은 러시아에서 러-일 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함정 '바라크'호의 영웅적 전투를 기념하는 날임.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순양함 바라크 승조원들은 제물포(지금의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 함정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패전 가능성이 짙어지자 항복을 거부한 채 군함을 침몰시키거나 폭파시키며 끝까지 저항했음. 40여 명의 수병은 군함과 함께 침몰해 자결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공군의 일본 영공 인접 초계 비행이 이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고 러시아 인테르파스 통신은 전했다.
- ◇ 日 근접 비행 횟수 크게 늘어 = 근년 들어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영공에 접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지난해 9월에도 Tu-95MS 폭격기 2대가 한반도 동쪽에서 남하한 뒤 대한해협, 오키나와를 거쳐 태평양을 북상하는 코스로 19시간에 걸쳐 공중 급유까지 받으면서 일본 열도 인근을 비행하고 돌아갔음. 같은 해 7월에도 2대의 Tu-95MS가 약 11시간 동안 일본 인근 동해 상공을 따라 초계 비행을 펼쳤음. 이에 일본과 한국 전투기 10대가 대응 출격해 러시아 폭격기들을 감시한 바



있음. 이 사건 후 일본 정부는 자국 영공 인근에서의 훈련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앞서 2010년 10월과 11월에도 러시아 Tu-95MS 전폭기들이 태평양과 동해 상공에서 연이어 초계 비행을 실시해 일본과 한국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 소련 붕괴 이후 예산 부족으로 태평양과 대서양, 북극해 등에 대한 전략 폭격기의 초계 비행을 중단했던 러시아는 2007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현 총리)의 지시로 이들 해역 상공에서의 초계 비행을 재개했음. 이후 주기적으로 훈련 비행을 계속해 오고 있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3천km 이상의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Tu-95 시리즈 폭격기는 1만 km 이상의 장거리를 비행하며 어떠한 지리적, 기상적 여건 아래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공포의 폭격기로 알려져 있음.

## 아. 기 타

### ● 中 해군·국가해양국, 영해 순찰활동 협력키로(2/7)

- 중국의 해군과 국가해양국이 자국 해양권의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음. 통신은 최근 국가해양국의 류츠푼이(劉賜貴) 국장과 해군의 우성리(吳勝利) 상장(上將·한국군의 대장)을 대표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갖고 제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류 국장은 좌담회에서 "중국은 해양 사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뿐더러 인민의 관심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고 있다"고 현실 인식을 전했다. 국가해양국은 자국 영해에서 순찰활동을 벌이는 국무원 산하 정부기관이고 해군은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방위 업무에 주력해왔으나 류 국장과 우 상장의 회동을 통해 '합동'작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와 일본과의 세력 다툼해역인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개입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제기됨. 국가해양국은 해감총대(海監總隊·한국의 해양경찰청)를 운용하면서 동중국해에는 동해총대, 남중국해에는 남해총대를 두고 있음.
-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동해총대는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와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키바<白樺>) 가스전 등의 감시 활동에 주력하며 배수량 1천t 이상의 순찰선 7척을 포함해 19척의 선박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은 지난해 동해총대에 위성통신시스템(GPS)을 갖춘 3천t급의 '중국 해감 50'을 취역시켰음. 남해총대는 순찰선 13척을 보유 중이며 앞으로 5년 내에 36척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이 남중국해에 해양전력을 강화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남중국해 마찰이 커지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이미 미국에서 건조한 사실상 군함 수준의 해밀턴급 순찰선을 투입해 중국에 맞서고 있음. 난





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와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를 아우르는 남중국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원자재 국제수송로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높음.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이 자국 주권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 한중일, 5월 정상회담서 투자보장협정 체결(2/9)

- 오는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오는 5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한·중, 한·일, 중·일 간에는 각각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나 3국간 협정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투자기업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한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면 중국 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2007년 3월부터 투자보장협정 교섭을 시작한 3국은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열리는 마지막 교섭에서 협정내용을 정하고 5월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할 예정임. 일본은 당초 투자 실행 전 단계의 외국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 등을 중국측에 요구하다가 최근 들어 요구 수준을 낮춰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3국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상품 관세와 서비스 및 금융 장벽 철폐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FTA에서 투자자 보호는 한축을 담당하기 때문임.
- 한중일 3국은 원칙적으로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나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음. 중국은 인구 17억명, 국내총생산(GDP) 10조 달러에 달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임. 동북아 FTA 추진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항하는 효과도 있음. 일본은 TPPA 참여를 결정했지만 최근에는 한중일 FTA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일본은 중국과 함께 5월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 선언을 하지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 이미 국내 절차 개시를 선언한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임. 이미 미국, EU 등과 FTA를 맺는 상황에서 중국과도 체결하게 되면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 그렇다고 동북아경제권 통합을 지향하는 한중일 FTA 추진에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월 정상회담에서 한중일이 FTA 협상개시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중 FTA와 한중일 FTA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 <무기 신흥시장으로 아시아 뜬다>(2/10)

- 중국을 필두로 이웃 나라들까지 군비를 확대하면서 아시아가 새로운 무



- 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남중국해, 한반도, 대만 해협 등의 긴장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풀이됨. 게다가 중국이 앞장 서서 군사적 팽창을 꾀하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이를 뒤따르는 형국임.
- 아시아 지역의 전투기, 미사일, 그 밖의 무기에 대한 예산은 오는 2016년까지 연평균 4.2% 증가해 1천140억 달러(약 127조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시장조사 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이 전망했음. 특히 최근 첫 항공모함을 진수하고 새 쥘(殲)-20(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음. 현재 연간 6천억 위안(약 106조8천억 원) 수준인 중국의 국방비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45% 증가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음.
  - 70억 달러(약 7조8천억 원)를 들여 전투기 60대를 살 계획인 한국은 미국과 유럽 무기업체들이 군침을 흘리는 곳임.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사브의 그리펜 등의 전투기가 경쟁을 벌이고 있음. 한국 방위사업청은 또 육군과 해군 장비로 공격용 헬리콥터를 구입할 예정이며 무인비행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 대만은 37억 달러(약 4조1천억 원) 예산으로 록히드마틴 F-16s 145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레이더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일본은 지난해 말 F-35 스텔스 전투기 42대를 록히드에서 사기로 했는데 일본 방위성은 전투기를 사고 20년 넘게 운용하는데 1조6천억 엔(약 2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음. 또 인도는 지난주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 업체 다소를 전투기 126대를 공급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음.
  -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서유럽의 국방비가 지난해 5% 감소했고 올해는 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음. 반면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방비는 지난해 14% 늘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됐음. 유로파이터를 생산하는 EADS와 BAE시스템즈 등의 합작사 최고경영자 엔조 카솔리니는 아시아가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중동 지역에서 입찰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재정 위기 때문에 긴축에 들어간 유럽 정부들이 군비를 삭감하면서 유로파이터는 생산이 둔화됐음.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시온의 빌 스완슨 최고경영자도 "아시아와 중동은 중요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록히드마틴도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미사일 방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피치는 최근 "신흥 시장의 수요가 크게 성장하는 것은 서구 무기업체에 반가운 일"이라면서 "중기적으로 신흥 무기 시장에 대한 의존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편,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는 일본으로 지난해 545억 달러(약 61조원)를 썼음. 413억 달러(약 46조2천억 원)를 쓴 인도가 3위로 뒤를 이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